

# 檢, 5·18 유죄판결 45명 직권 재심 청구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최근까지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심 청구를 의뢰받은 86건 112명 중 내란 중요 일 무 종사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고(故) 홍남순(당시 66세) 변호사 등 41건 45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화의 대부로 지칭되는 홍 변호사는 김모씨 등과 공모해 1980년 5월22일 시민대표 수습 대책위를 구성한 뒤 계엄 당국에 요구하는 7개 항을 결의하고, 시민에게 무력항쟁을 계속하도록 지시·격려하는 등 내란 중요 입부에 종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관할권이 없는 39건 53명에 대해서는 각 관할 검찰청으로 서류를 이송할 방침이다.

또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건 및 당사자가 신원미상인 사건 등 6건 14명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재심 청구대상은 광주 지역 계엄사령부 산하에 설치된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재심사유가 인정됐지만 당사자(피고인) 측에서 현재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특별법 4조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사태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재심청구 대상 당사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18 전후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대상은 160건 402명이다.

이중 284명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 1980년 5월27일 새벽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시민을 상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마지막 방송에 나섰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영순(59·여)씨가

## “대부분 재심 절차 몰라...가족에 의사 확인” 전체 402명 중 284명은 이미 무죄판결 받아

재심을 청구해 35년 만인 2015년 6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2건 6명은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번 재심 청구 당사

자와 가족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재심 청구 등의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

당사자 다수는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

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계속 파악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공안부와 협조 5·18 민주화운동이나 같은 시기 헌정질서 범죄로 처벌받은 피고인들 및 가족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춘정 기자



화마에 휩싸인 모형항공기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모형항공기 소방훈련장에서 열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이 항공기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 전남선관위, 불법 명함 배부 교육감 선거운동원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선거운동원 B씨를 17일 광주지방법원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 장성군 관내 15개 마을 80여 세대를 방문해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명함 1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

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결핵 주사형 백신 6월중 국내공급 재개

그동안 중단됐던 주사형(피내용) 결핵 백신 공급이 다음달 중순부터 재개돼 동네의료기관에서도 BCG 피내접종이 가능해진다.

1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한국에서는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다.

지난 3월 덴마크로부터 수입돼

공급 예정인 피내용 백신은 4만 5675바이알(약 7개월 사용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시험(72일 소요)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급된다. 다음달 2주부터는 접종이 재개될 예정이다.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결핵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은 애초 일정대로 다음달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뉴시스

## 완파 차량 정상으로 속여 대출사기 일당 덩이

완파된 고급 외제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것처럼 속여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17일 사고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금융사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A(35)씨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21일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완파되거나 반파된 고급 외제차량을 300~500만원에 구입한 뒤 정상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금융사 2곳으로 4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과 자문, 중고차 알선책, 대출 명의자 모집책, 대출 명의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알선책으로 고급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정상차량인 것처럼 자동차 등록 서류를 만들었다.

또 제2 금융권은 3000만원 미만의 대출의 경우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로만 대출심사를 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출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3~6개월가량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에 이용한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켰다.

경찰은 제2금융권의 대출심사 허점을 노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광주서 시내버스·승용차 충돌 2명 부상

16일 오후 9시29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교차로에서 김모(51) 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정모(25) 씨의 SUV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김 씨와 승객 윤모(64·여)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20여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와 SUV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각각 직진과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음란 동영상 촬영, 유포한 20대 구속

스마트폰 영상 채팅 메시지를 이용, 여학생 등 30여 명의 음란행위 영상을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A(25)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스마트폰 영상 채팅 메시지를 이용해 B(13)양 등 30여 명의 음란행위 영상을 몰래 녹화해 해외 SNS에서 C씨 등 150여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음란 영상 900여 개를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에 이르는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뒤 중고거래소에서 환전해 1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 오피스텔서 '대마 농장' 운영 일당 구속기소

도심 오피스텔에서 1억원대 대마를 수경 재배한 뒤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영)는 대마 판매사이트에서 '서울 킹'으로 활동해온 A(36)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개월간 1억 2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클론방식'의 수경 재배로 단기간에 대마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클론방식이란 성숙한 식물의 줄기와 잎 일부를 떼 뒤 물에 넣어 줄기에서 뿌리가 내려오도록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산에 위치한 45평짜리 오피스텔에 수로와 펌프, 조명, 자동 커튼 등 전문 수경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대마키를 만들어 보관했고, 공범 B씨가 이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오피스텔에서 재배하고 있던 대마 300주와 함께 1kg 상당의 대마, 대마키 등도 압수했다.

